

“3조 규모 산불 추경요청… 임시조립주택 2700동 설치”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주거문제 시급… 불편 최대한 해소
재해주택복구자금 용자 정책 실시
1억2400만원, 연 1.5% 금리 적용
범정부 지원대책본부 설치 협의

정부여당이 3일 기록적인 피해를 낸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해 산불 피해 복구 추경 편성, 임시 주거 시설 지원, 주택복구자금 용자, 범정부 지원대책본부 설치 등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 측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정부 예산을 편성해 조치할 것”이라며 “예비비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에 대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최대한 빨리 편성해 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 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출하겠다는 교감은 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당정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설치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지원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피해 현장에 가보니 가장 시급한 현안이 주거 문제다. 임시주택을 조속히 설치해서 이재민들을 옮기는 것이 급선무”라며 “임시주택이 내 집 같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거주

하면서 겪게 될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할 방법도 꼼꼼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정은 산불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복구자금 용자 정책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3년 거주 이후 17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재민이 민간주택 입주를 원하는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입주에 대한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특례를 제

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 지원대책본부를 설치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와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추진하는 것을 여당과 협의 중이다.

추가로 생활안정지원금 선지급, 농기계 무상 수리 및 점검, 취약계층 농사 자금 대행 서비스, 정부 범부처 무상공급, 사료 무상 지원, 가축 진료 및 축사 복구 지원 등 농가와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 지역 의원 건의사항 중에 국립공원 내 안전관리 측면에서 임도 개설 등 전면적인 안전 관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환경부가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1만 리터 이상의 대형 헬기 진화 장비 구입이 시급한데 이 부분도 정부 예산에 반영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산불재난대응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이 다르다”며 “사회재난이 최대 3600만원이고, 자연재난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자연재난에 준하는 수준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법은 가장 피해가 큰 경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 지역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멸지역이다. 일반적인 복구로는 지역 자체의 소멸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尹 복귀 시 개헌” vs 野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필요”

권영세 “‘87체제’ 모순 드러나
시대정신 맞는 헌법 만들 것”

李,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참석
“국가 폭력, 역사서 재발돼선 안 돼”

은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고정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1987년 체제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론’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제발의 의지를 드러내며 서로 으르렁댔다.

국민의힘은 1987년 개정된 헌법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방법이 담기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로 직무에 복귀할 시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흔히 제약적 대통령제로 생각했던 헌법이 실제로 의회 독재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약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심판 ‘승복’을 거듭 언급하며 내심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를 바라는 모습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현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극언을 내뱉으며 마치 자신이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듯이,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라도 되는 듯이 망상에 빠져 있었지만, 사실은 내란 선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누가 진정 헌정을 수호하는 정당인지 명백하다”며 “탄핵이 기각돼도, 또 인용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지지자들의 감정을 다독이면서 차분하게 현재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하면서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꽃이 피는 시기이지 하지만 4월3일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이었고, 제주도민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약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국가 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선 안 된다”며 “제주 4·3 당시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에 계엄령으로 국민 학살이 일어났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꾸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지만, 12·3 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엔 약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드러나 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개, 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다. 모두 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중계 등을 통해 지켜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이들은 각각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월급방위대 “소득세 기본공제 180만원으로 현실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3일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민주당의

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란 말이 일상이 된 현실, 월급쟁

이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실제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2025년 61조5000억

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은 약 61조원에 달한다”며 “특히 대기업·초부가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포인트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기업과 초부가 감세에 따른 세수편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

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기본 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명분이 크다”며 “또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